

신안군, 도서 지역 한계 넘은 교육 투자 '결실'

올해 고교 졸업생 78.5% 대학 진학
郡, '교육정책특별보좌관' 제도 신설
2018년부터 학생에 130만원 지원
해외 연수·고교 무상교육 등 혜택도

신안군이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인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감한 교육 투자가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뚜렷

한 진학 성과로 이어지며 지역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149명 가운데 약 78.5%에 해당하는 11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4년제 대학 5명, 전남대·조선대 14명, 교육대 3명, 지방권 4년제 대학 68명이 각각 합격했다.

더불어 12명은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학업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됐음을 수치로 증명했다.

성과의 배경에는 '도서 지역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신안군이 장기적으로 단행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돼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 2018년 이후 신안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왔다. 이는 관내 전체 학생 약 1천500명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약 130만원 수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그동안 군은 교육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교·지역·교육기관 협력 체계 구축 ▲교육발전 특구 및 공동교육과정 연계 등 지원망을 가동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여왔다.

신안군은 이번 진학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총 33억원 규모의 교육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 방과 후 학습 지원,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중·고교 조·석식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원어면 보조교사 배치, 교육발전특구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해남군,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운영

14개 읍·면 동남부·서북부 재편
65세 이상 불편 가구 밀착 지원

해남군이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14개 읍·면을 동남부권과 서북부권 등 2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사업을 전담할 전문수행기관 2곳의 선정을 마쳤다.

제1권역(동남부) 수행기관인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은 해남읍을 비롯해 삼산·화산·현산·송지·북평면을 전담한다.

제2권역(서북부)을 맡은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북일·옥천·계곡·마산·황산·산이·문내·화

원면 등 8개 면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

이들 기관은 읍·면 통합돌봄창구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가사 지원, 맞춤형 도시락 배달, 병원·관광지 방문 밀착 동행, 찾아가는 아·미용, 낙상 예방용 주거 환경 개선(안전 손잡이 설치 등)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시급한 가구다.

서비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내 통합돌봄 창구에서 접수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권역별 전담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촘촘히 살피는 빈틈없는 복지 그물망을 완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진도군 지사협, 통합 돌봄 대응 기반 강화

진도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제12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안전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마치고 총출동 복지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분과를 신설해 지역 내 통합 돌봄 대응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제11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과 함께 오승호 민간 공동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이어 생활보장전문위원회 구성, 읍·면 특화사업, 연합 모금인 '모아드림' 자체 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새롭게 출범한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명, 실무협의체 25명, 7개 실무분과 68명으로 꾸려졌다.

오승호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복지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강진군, 사의재 일대 '목재친화도시' 조성 속도

산림청 공모...5월까지 특화거리 완공

강진군이 산림청 공모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도심 생활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사의재부터 동문길 일대를 목재 특화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작을 마친 조형물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 모든 시설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에는 어린이 목재 놀이터를 비롯해 각종 조형물과 포토존, 목재 펜스, 가로 시설물 등 자연 친화적인 기반 시설이 들어선다. **〈사진〉** 사업에 활용되는 목재는 소나무 약 2만2천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총 15만kg 이상의 탄소 저장 효과를 내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근진 산림과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강진의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라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목재의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강진을 대표하는 목재친화 도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완도군, 바다·숲·섬 활용 체류형 프로그램 선봬다

1박2일-5박6일 체험 구성
郡, 참가비 최대 70% 지원
참가자 생체 데이터 측정도

완도군이 바다와 숲, 섬 등 지역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기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치유 활성화와 객관적인 효과 검증, 그리고 체류형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일정은 1박2일부터 최대 5박6일까지 구성되며, 해양 기후 치유, 산림 치유, 섬 투어, 전북 채취 등 지역 특화 콘텐츠와 치유 식단 체험이 폭넓게 진행된다.

특히 2박3일 특화형 프로그램은 맨발 걷기와 캠핑 리트릿, 반야외 극복 등 자연환경과 해양치유를 결합한 테마형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 스트레스와 우울, 수면 장애, 근골격계 및 대사 질환 등 집중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



완도해양치유센터 전경.

〈완도군 제공〉

한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 과정도 마련했다. 군은 늘어나는 치유 수요를 반영하고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과 환자, 가족 단위 방문객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체류형 프로그램의 핵심인 '치유 효과 검증'도 철저히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건강 상태와 심리 지표, 생체 데이터 등

을 측정하게 되며, 군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오는 4월 초 완도해양치유센터 및 군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의 우수한 치유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목포시의회 예결특위, 업무추진비 전액 반납

재정 운영 모범사례 평가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며 재정 운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시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예산 심사하는 의회가 먼저 절제된 재정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재정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박효상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을 심사하는 위치에 있는 예결특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작은 금액이라도

시민의 세금인 만큼 불필요한 집행은 줄이고 재정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왔다.

앞서 의정단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의정단 업무추진비의 40%를 삭감했으며, 이를 포함해 의회 업무추진비 총 4천 65만6천원을 감액해 예산 절감에 나선 바 있다. 또한 2025년도에는 공무원연수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재정 절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보여왔다. /목포=정해선기자



영광군은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

재생에너지 발전이익 군민 공유

영광군은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는 장세일 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회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군민과 함께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

득 도시' 실현 의지를 함께 다졌다.

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와 단계적 실행 전략,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 군수가 기본소득 도시 실현을 향한

의지를 담은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소득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회와 발전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해, 발전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 속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 군수는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군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군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 영광을 대한민국 에너지 기본소득의 선도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